

# 라틴아메리카 노동의 딜레마 : 새 시대 노사관계의 재편

Bruno Dobrusin (아르헨티나 노동연구센터(CEIL) 박사후연구원)  
Juan Montes Cato (아르헨티나 노동연구센터(CEIL) 연구위원)

## ■ 서론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는 지난 30년간 극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유연성이 증대되고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었으며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자로서 국가의 역할은 후퇴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에 대해 오늘날 노사정의 상호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당면했음을 주장한다.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델인 코포라티스트 모델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내려온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며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가 대두하고 있으나 아직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유연성, 비공식성, 불안정성이 커지는 지금과 같은 전환기는 새로운 상황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을 근로자와 노조의 관점에서 고찰하여 라틴아메리카 인구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겪는 현실을 그려보고자 한다.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의 변화는 일률적이지 않은데 그것은 이 지역 노사관계의 조직화 방

\* 편집자 주: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가 사용되는 아메리카 내의 대략 20개의 주권 독립국 및 속령을 가리키는 지역이다. 공식적으로는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 일대를 가리키며, 미국 이남의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라틴아메리카로 정의한다면, 라틴아메리카의 기초 지리학적 하위 지역은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카로 구분된다. 통상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합쳐 중남미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북아메리카 국가인 멕시코가 포함되지 않는다.

식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Berins Collier and Collier, 1991).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국가는 20개국이 넘으며 노사관계제도 또한 각기 다르게 발전해왔다. 이 지역 국가들을 어떻게 분류하든 이는 자의적인 기준일 뿐이다. 이 글에서는 코포라티스트 제도와 비코포라티스트 제도라는 두 가지 일반적인 분류를 제시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노사관계 모델인 코포라티즘은 노조와 사용자 사이를 국가가 중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분류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고찰할 수 있다.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 문화가 발전한 그룹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루과이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국가 중 대다수는 비코포라티스트 모델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불변이 아니며 이 지역의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노사관계의 형태가 지속적으로 변해온 것을 알 수 있다(Berins Collier and Collier, 1991; Etchemendy, 2011).

이 국가들을 각기 다른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이 지역에 공통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라틴아메리카는 현재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1억 3천 4백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46.8% 수준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ILO, 2016). 노사관계의 유연화로 인해 시급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 아웃소싱으로서 이는 노조화 역량을 약화시키고 다국적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다른 당면 문제는 근로시간인데, 라틴아메리카는 전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다(CEPAL, 2012). 마지막으로 지적할 문제는, 2000년대 첫 10년간 중도좌파 노동친화적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노조 조직을 하락을 겪고 있는 지역 근로자들과 다국적 대기업 사이의 노사관계 격차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질임금 인상, 실업률 개선, 공식 고용 증가를 통해 노동기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과 고용 취약성이 확대되는 추세를 역전시키지는 못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노동관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지난 30년간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향후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고찰한다. 역내 국가들을 상세히 분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시한다. 이하에서는 코포라티즘의 역사를 요약하고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의 역할을 살펴보며 지난 10년간의 중도좌파 정치의 과정을 돌아본다. 이어서 노사관계의 현안을 돌아보고 향후 선택 가능한 방향을 제시한 후 마무리한다.

## ■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의 역사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제도는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같이 집중적인 산업화 시대를 거친 나라들은 1940년대 초부터 근로자들을 대거 조직화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같은 규모의 노조 운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Zapata, 1993). 코포라티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일정 정도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노사관계의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다. 193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코포라티즘의 시작은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이나 멕시코의 프리이즘(Priism)<sup>1)</sup>과 같은 정치운동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Berins Collier and Collier, 1991).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는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특징이다. 코포라티즘의 기원은 대공황 이후 서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후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면서 독자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중심 행위자로서 국가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거나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Murillo, 2005). 국가는 이러한 중재행위를 통해 양측의 급진적인 집단을 통제하며, 노동과 자본은 자신들의 요구를 의사결정 최고단계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과 자본이 각각 하나의 단체로 대표되는 독점적 대표성의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작동한다. 국가는 이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균형’ 밖에 존재하는 단체는 심한 탄압을 받고 국가 자원에 대한 접근도 허락되지 않는다. 코포라티즘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실용적인 제도로 작동하였으며 노사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수단이기도 하였다(Dobrusin y Montes Cató, 2017). 이 글은 코포라티즘이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현 단계의 노사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1) Priism은 20세기 대부분(1929~2000년)의 멕시코 정치를 지배했던 정치운동이다. 멕시코 혁명 이후 창당되어 65년간 여당 지위를 유지한 제도혁명당(PRI)의 정치활동을 모태로 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업 및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협동 조합 체제를 강화했다. Priism은 대부분의 대중적인 정치세력과 마찬가지로 1940년대에 추진하던 개발 전략을 철회하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다. 2000년 여당 지위를 잃었다가 2012년 12년 만에 다시 여당으로 정권을 재창출했다.

코포라티즘은 산업화 초기 단계의 특성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에서 널리 정착할 수 있었다. 노조의 규모와 위상은 날로 커졌으며 생산자본은 확장했고 국가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의 구조하에서 부수적인 현상이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코포라티즘은 반폐쇄형 경제체제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규모가 대부분의 기업보다 컸으며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은 제한적이었다. 그 후 지난 30년간 이러한 환경이 변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코포라티즘이 하나의 제도로서 수명을 다해간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등장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에도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군부독재시기에 민영화 정책과 국가 역할 축소 정책을 통해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에도 1990년대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국가가 중심 행위자로서 경제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초국가적 자본에 대한 통제력 역시 제한하기 때문이다 (Panitch and Gindin, 2012). 노조는 점차 국가의 중재 없이 강력한 기업들에 직접 대응해야 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이들 기업과 직접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어젠다는 노사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편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노동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본의 힘을 강화했다. 국가는 과거에 행했던 근본적인 개입자의 역할에서 물러났다. 그 방법은 외채 증가와 외채 이자상환 우선화 등으로 정부지출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요 국유자산 및 기업, 특히 공공서비스 부문을 민영화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 결과 경제 전반에서 국가의 존재가 축소되었고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을 감소시킴으로써 노조가 약화되는 이중 효과가 나타났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는 특히 아르헨티나와 같이 강력한 단체교섭 전통이 있는 국가의 노사관계에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사관계 유연화, 교섭의 분권화, 사업장 수준의 단결 약화를 야기했다. 노사관계의 유연화는 하청과 외주화 확대를 허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더 이상 핵심 산업이나 기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 속하며 부차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노동권, 임금수준, 국가규제 등이 약화되었다. 단체교섭은 기업별로 분권화되었는데 이는 코포라티즘이 정점에 이르던 시기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서 산별교섭이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요소였던 시기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분권화는 결국 자본에 비해 노조와 노동의 세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그동안 산별교섭을 통해 근로조건과 노조 조직률<sup>2)</sup>을 높게 유지해왔다. 교섭이 분권화되면서 각 단위 노조별로 과거 대비 더 거대해진 초국가적 자본에 대응해 근로조건을 협상하게 되었다. 바로 이 점이 사업장 수준에서의 조직화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실업 증가를 야기하고 개인주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노조 가입률을 확대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 내 사업장 수준의 노조 조직의 생존력을 약화시켰다.

1990년대 말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대다수는 이미 반폐쇄적, 개발지향형 경제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개방형 자유시장 중심 경제로 탈바꿈했다. 이로 인해 노사관계 역시 크게 바뀌었고 코포라티스트 제도의 기본 개념이 도전에 직면했다. 노조 조직률은 감소했고 총소득에서 대기업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졌고, 2000년대 초에 중도좌파 정부가 탄생하면서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좌파 정당들은 노사관계 다시금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정당 강령에 포함시키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 지역의 변화 및 노사관계의 변형

신자유주의는 라틴아메리카 노동운동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노사관계 유연화, 외주화 증가, 단체교섭의 분권화는 코포라티스트 모델하의 노조 및 노사관계에 크나큰 도전과제를 던져주었다. 국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중심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노조는 전반적인 조직화가 침체되면서 조직률이 감소했다(Roberts, 2007).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한때 조직률이 높았던 국가에서도 노조의 조직화 역량이 크게 위축되었다. 자본의 측면에서도 사용자단체의 분권화와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정책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역내

2) 라틴아메리카의 노조 조직률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장 최근 수치에 따르면 주요국의 노조 조직률은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37.7%, 우루과이 30.1%, 브라질 16.6%, 칠레 15%, 멕시코 13%, 코스타리카 6.7%.

대다수 국가에서 정치지형이 바뀌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등 국가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탄생하면서 고용이 회복되고 노동의 공식화, 실질임금 상승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Cook, 2011). 소위 신개발경제모델(neo-developmental economic model)은 국가를 다시 중심적인 경제주체로 두게 되었고 소비를 통해 내수시장을 재활성화했다(Boito Jr, 2012). 물론 이러한 신개발주의 정치경제는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라틴아메리카산 원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임금 및 사회적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자재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특히 남미에서 진행된 노동시장 공식화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이 회복되었다(CEPAL, 2010). 새로운 노동법은 집단적·개별적 노동권을 강화했고(Cook, 2011) 공식 일자리 창출이 꾸준히 이어졌다. 불평등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라틴아메리카의 핵심 문제로 남아 있다(CEPAL, 2010). 성별에 따른 노동의 분업, 비공식부문에 만연한 저숙련 일자리, 청년실업 등이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노동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로의 복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생산방식의 변화, 신기술 도입, 자본의 집중 및 초국가주의로 인해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가 이 단계에서 재활성화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규제 도입과 국유기업을 통한 경제 개입 등 국가의 역할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절정기에 이르렀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고착된 변화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또한 원자재 붐이 꺼지면서 역내 다국적기업들이 본사로 수익을 이전하는 자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자본의 집적으로 일부 기업의 규모는 국가를 초월하기도 하고 하나의 생산요소가 아닌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기도 했다. 결국 국가의 생산 및 개발전략은 자본의 확장전략에 의존하게 되었다. 무역협정, 양자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확산 또한 국가가 자본을 규제할 수 있는 구조적 역량을 약화시켰다. 노조운동은 분열과 관계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에 시달렸다. 1950~60년대에 걸친 전형적인 개발단계에서 코포라티즘을 통해 이루어낸 노조,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권력 균형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노동운동 약화는 다국

적 자본의 강화와 상호 연관되어 진행되었다.

경제성장 둔화 및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중도좌파 정부가 실권하는 정치적 변화가 있었다. 남미 국가들에서는 우파 자유무역 옹호 정치세력이 집권하게 되었고 성장 둔화로 인해 구조조정 정책이 다시 득세하였다. 노동시장 상황은 다시 악화되어 비공식 고용이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체 고용의 50%에 육박하고 있다(ILO, 2016).<sup>3)</sup> 또한 공식부문에서도 불안정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신기술 도입, 근로방식의 재편, 노동인구의 변화 등과 같은 현상으로 문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는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통합적이고 독점적 대표성을 가진 노사 대표가 협상의 중심에서 국가와 교섭하는 코포라티스트 모델을 재현할 수는 없다. 노조 조직률 하락, 조합원 감소, 기존 제도하에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불안정한 비공식 근로자 증가와 같은 요인으로 노조의 독점성은 크게 약화되었다. 자본 역시 과거처럼 다양한 산업을 조직화하여 중앙사용자단체를 만들던 구심점이 없다. 자본의 집약 및 중앙집중화가 사용자단체의 약화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하나의 공간이자 구조로서 국가는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량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 이는 19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의 현안에 대해 검토한다.

## ■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의 현안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앞에서 살펴본 변화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모델이 있는가? 이번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날 노사관계의 현황과 미래 방향성에 대해 명확한 지표는 없지만 과거의 유사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요소를

3) 지난 5년 동안 라틴아메리카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은 안정적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6년 지역보고서에 따르면, 선택된 14개의 국가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율은 2009년 50.1%에서, 2014년 46.5%로 하락하였고, 2015년 46.8%로 증가하였다. 동일 보고서는 2016년과 2017년 비공식 부문 종사자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여기서 핵심은 코포라티스트 모델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코포라티스트 모델을 이론적,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려는 노력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20세기 초의 유사한 상황을 토대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 방향성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몇 가지 가능한 노사관계의 방향성도 검토해본다.

미국 노동사회학자 Ruth Milkman(2013)은 최근 논문에서 노사관계가 ‘미래로 돌아갈 수 있다(back to the future)’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화된 정부주도형 단체교섭의 시대는 끝나간다고 주장했다. Milkman은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대신 노사관계의 현 상황이 20세기 초 소위 ‘황금시대’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Milkman 주장의 핵심은 노조가 ‘뉴딜 시대 이전 미국 노동운동의 전략적, 기술적 레파토리를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Milkman, 2013: 648).

Milkman의 분석은 미국사례를 근거로 하지만 이 글에서 서술한 라틴아메리카의 현황에 대응해 나가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Milkman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라틴아메리카 노사관계도 20세기 초 상황과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완전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이미 국가에 대한 의존도 약화, 사업장 수준에서 조직화의 필요성, 초국가적 노동네트워크라는 유사성이 눈에 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보자.

중재자로서 국가의 존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와 기업 사이의 갈등과 협상이 점차 국가의 중재역량을 초월한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 이는 특히 초국가적 기업이 연관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한데, 이들은 국가 간 체결한 장치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협상은 기업과 노조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일 뿐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사이의 다양한 글로벌기본협약(Global Framework Association) 체결이나 국제산별연맹(Global Union Federations)의 탄생은 변화의 징조라 할 수 있다. 글로벌기본협약에서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협약 체결도 국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자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는 동시에 노동운동은 점차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자본의 국가 포섭이다. 이는 대기업 사장 출신들이 정부 요직에 진출한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혼합’은 중재 역할을 위해 필요한 분리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둘째 요소는 사업장 수준에서 조직화의 필요성이다. 사업장 노조는 자본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Braverman, 1980). 사업장에서 코포라티스트 노사관계하에 형성된 관계는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다(Montes Cató and Dobrusin, 2016). 사업장 노조는 단지 생산과정의 정치경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뿐 아니라 회사가 창출한 잉여가치, 그리고 그 잉여가치의 분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Gilly, 1985). 사업장 노조의 조합원은 지역 사업장 경영진에 대항하는 세력이다. '최상위'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교섭력이 약화되면 이로 인해 사업장 단위 노동쟁의와 조직화가 강화되어 기존 노사관계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사업장 노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사업장 노조의 역사가 긴 나라들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 있다. 노조운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지난 20년간 사업장 노조의 투쟁적 성향도 점차 감소했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상위 단계의 협상이 부재하고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노조가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양상은 물론 20세기 초와는 다른 모습일 것이다. 신기술이나 소위 공유경제의 확산 등으로 점차 사업장을 공유하는 근로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술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들의 접촉이 더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선 근로자들의 조직화에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셋째 요소는 현 노사관계의 초국가적 특성이 가까운 미래에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는 국가, 사용자단체, 노조가 여러 단계에 걸쳐 지역별 또는 집단적인 연대를 맺어온 역사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는 이러한 관계, 특히 노조 측 관계를 더 진일보하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그 어떠한 노조도 초국가주의 전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근로자 집단도 아무리 국내에만 국한된다 해도 유사한 산업의 다른 근로자들,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에 속한 근로자들과 단절될 수는 없다. 지난 10년간 일부 라틴아메리카 다국적기업(Multilatina)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했다. 이는 이러한 산업의 근로자와 노조가 다국적 기업과 협상하기 위해 자신들의 투쟁과 조직을 초국가화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다.

상술한 세 가지 요소는 라틴아메리카뿐 아니라 전 세계 노사관계를 규정짓는 특성이 될 것이다. 과거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아직 일부 잔존하지만 국가 중심 모델로부터의 변형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 ■ 결론

라틴아메리카의 노사관계는 지난 30년간 과도기 상태였다. 그동안 지배적인 노사관계 모델이었던 국가가 개입하는 형태의 코포라티즘은 오늘날 상당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 글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개입한다고 해서 점차 부와 권력이 집중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협상력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노조운동은 글로벌 어젠다의 등장,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비공식 고용, 불안정 노동의 '뉴노멀'화 등과 같은 큰 과제에 당면해 있다.

이 글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노사관계의 핵심을 구성할, 그리고 지금도 이미 일정 정도 존재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 새로운 현안에서 가장 큰 난제는 노조운동이 당면한 과제이다. 비공식 부문의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면서 기존 노조 체계를 재편하는 동시에 사업장 노조를 강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Milkman이 지적하였듯이 20세기 초 노조 운동은 지금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되돌아볼 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노조가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 중인 노사관계의 재정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KLI**

---

---

## 참고문헌

---

---

- Berins Collier, Ruth & Collier, David(1991), *Shaping the Political Arena: critical conjunctures, the labor movement and regime dynamics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oito Jr, Armando(2012), *As bases políticas do neodesenvolvimentismo*. Forum Economico da FGV, Sao Paulo.
- Braverman, Harry(1980), *Trabajo y capital monopolista*, Mexico: Editorial Nuestro Tiempo.
- CEPAL(2010), *La hora de la igualdad. Brechas por cerrar, caminos por abrir*, Santiago de Chile: CEPAL.
- \_\_\_\_\_(2012), *Panorama Social de America Latina*, Santiago de Chile: CEPAL.
- Cook, Maria L.(2011), “Unions and Labor Policy Under Left Governments in Latin America”, *Revista Trabajo* 5(7), pp.55-73.
- Dobrusin, Bruno and Juan Montes Cato(2017), “Repensar el conflicto sindical latinoamericano frente a las estrategias del capital transnacional”, *Revista Theomai*, 36, pp.148-161.
- Etchemendy, Sebastian(2011), *Models of Economic Liberalization: Business, Workers, and Compensation in Latin America, Spain and Portug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ly, Adolfo(1985), “La anomalía argentina (Estado, Corporaciones y trabajadores)”, en *El estado en América Latina: teoría y práctica*, México DF: Siglo XXI.
- ILO(2016), *Panorama Laboral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6*, Lima: Oficina Regional OIT para America Latina y el Caribe.
- Milkman, Ruth(2013), “Back to the future? US Labor in the New Gilded Age”,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51(4), pp.645-665.
- Montes Cato, Juan and Bruno Dobrusin(2016), “Latin American trade unionism at a

---

new crossroads. From the centrality of the State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Trabajo y Sociedad* 27, pp.7-22.

- Murillo, M. V(2005), *Sindicatos, coaliciones partidarias y reformas de mercado en América Latina*, Madrid: Siglo Ventiuno Editores.
- Panith, Leo and Sam Gindin(2012),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American Empire*, London and New York: Verso Books.
- Roberts, Kenneth(2007), “The Crisis of Labor Politics in Latin America: Parties and Labor Movements during the Transition to Neoliberalism,” *International Labor and Working-Class History* 72, pp.116-133.
- Zapata, Francisco(1993), *Autonomía y Subordinación en el Sindicalismo Latinoamericano*,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